

# “관용여권 관리사무 개선을”

이용호 의원, “신분 상실자 소지 관용여권 회수 반납 기관 전체의 14%도 안돼  
위변조·도용 등 범죄예방 위해서라도 외교부가 법령 따라 조치 이뤄지도록 해야”



신분 상실자가 소지한 관용여권을 회수해 외교부에 반납하는 기관이 전체의 14%도 안되는 등 ‘관용여권관리사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10월말) 관용여권 자료를 제출한 73개 기관별 관용여권 회수·반납 실태를 분석한 결과, 63개 기관(86.3%)에서 신분 상실자의 관용여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여권을 회수한 10개 기관 중에서도 6개 기관(경기도, 고용노동부, 국립과천과학관, KOTRA,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은 일부만 회수했고, 4개 기관(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충청북도)만이 전부 회수해 외교부에

반납했다. 현행법상 여권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신분증으로,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을 회수해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관용여권 소지자가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대다수의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외교부로 반납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개인이 외교부에 반납하더라도, 소지자가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천공을 뚫어 되돌려주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관용여권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발급·사용돼야 하며, 소지자가 신분을 상실하면 해당 관용여권은 소속 기관장이 회수해 외교부에 반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단지 외교부 지침에 따라 신분 상실자에게 개별적으로

외교부에 반납할 것을 안내했다거나, 신분 상실자 명단을 외교부에 통보해 해당 관용여권의 직권무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한 것은 법령 상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해당 관용여권을 전부 회수한 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권법 제19조제3항은 여권 명의인이 반납해야 할 여권을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해 보존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 소인해 보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용 목적으로 발급된 관용여권 비자를 신분 상실자가 사용하기 위해 관용여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가 결과론적 측면에서만 관용여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관용여권 위변조·도용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분 상실자에 대한 관용여권은 법령에 따라 회수·반납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맞아

# 민족 자존·독립 위해 힘쓰신 이들을 기리며

전북도-광복회, 기념식 열어

전북도와 광복회 전북지부는 17일 우리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며 공헌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도민통합과 전북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전북보훈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도내 독립유공자인 대한일봉 애국지사 대한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전승과 해서규선 애국지사 대통령 표창을 수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한일봉 애국지사는 1932년 12월 전북 임실군에서 비밀결사 병천야학계, 1933년 4월 비밀결사 공복계 조직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아울러, 도내에 유가족이 없어 함께 포상 전승을 받지 못했지만, 1945년 3월 31일 전북 순창 공립농림중학교 재학 중 독립운동 비밀결사 화령회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돼 퇴학 처분을 받는 등 독립에 기여한 해서규선 애국지사에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후 전북



전북도와 광복회 전북지부는 17일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전북보훈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행정부지사, 이석규 애국지사, 주영생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최정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덕석 국립임실호국원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과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 최소 인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보고와 추모의 시 낭독, 순국선열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유호상 기자

최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망국의 치욕과 선열들의 피어린 투쟁을 기억하며, 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광복회원과 보훈가족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일제강점기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 배출 기념

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 추모제

일제강점기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을 기념하는 ‘일문구의사 추모제’가 완주군 비봉면에서 열렸다. 일문구의사(一門九義士) 선양사업회(회장 유희태)는 17일 81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완주군 비봉면 비봉공원에서 박성일 군수,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완주군의회 김재천의장, 전북동부보훈지청 주영생청장, 광복회 전북지부 이강안 지부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주민 등이 참석했다. 특히 선양사업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참석자들이 도착 순서대로 현화와 분향하는 방법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추모제는 9명 의사의 독립유공자 공훈록과 생생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9명의 의사는 완주 비봉 내일리에서 출생한 고흥 유씨 가문으로 유중화, 유태석, 유영석, 유명석, 유준석, 유현석, 유연청, 유연풍, 유연봉 의사다.



일제강점기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것을 기념하는 ‘일문구의사 추모제’가 17일 완주군 비봉면에서 열렸다.

선양사업회는 출범 후 활동을 통해 구의사들이 건국훈장 애국·애족장을 수여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사)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 유희태 대표는 “일문 구의사는 세종 때 일본 대마도 정벌을 한 유승장군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를 통해 잊혀져가는 순국선열에 대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후손들에게 겨레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 더 노력 할 것”이라며 “한 시대를 뜨거운 피로 살다 가신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아들 분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대

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는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을사조약의 치욕을 잊기 위해 제정된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에도 20(현재까지 428)명의 청소년들에게 만물레훈장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한편 (사)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 ‘일문구의사 추모사업’이 올해 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국민 참여 기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국회차원 방안 마련 약속

민주 김운덕 의원, CJ택배 전주서브터미널 물류현장서 노동자들과 현장간담회 열어 “생활물류법 등 법안 연내 처리 위해 당에서 힘모으는 중”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은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전주서브터미널을 방문해 물류 작업 현장을 지켜본 뒤 택배 노동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운덕(전주 갑) 국회의원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따른 국회 차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마련과 함께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운덕 의원은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전주서브터미널을 방문해 물류 작업 현장을 지켜본 뒤 택배 노동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택배 노동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 해에만 벌써 15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사망했는데,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언제든 닥칠 위험이다”면서 “거의 모든 택배기사들이 몸이 아파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택배 분류작업은 물론 상차작업까지 내몰리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

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김운덕의원이 처우개선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운덕 의원은 “놀랍도록 빠른 배송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에서 택배노동자를 위한 ‘생활물류법’ 등 법안을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있고, 연내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밖에도 택배노동

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류작업자 투가 투입, 지연배송에 따른 페널티 폐지, 표준계약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국토부와 협의 하겠다”며 “특히 전주서브터미널이 물류를 소화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협소한 관계로 접안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화질실 부족, 작업장 먼지, 상차 불편 등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자치단체와 협의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식

# “전북연구원의 책임있는 연구가 실시되도록”

행자위, 기획조정실 등 행감서 “관리·감독 철저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7일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센터 등 미진 실·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전북도에 각종 위원회가 총 146개나 있고, 기획조정실에는 16개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지만, 대부부 전주 등 특정 시·군 위원으로 편중돼 있어 불합리한데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각 지역에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위원회 구성을 균형 있게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연구원

에서 추진하는 수탁연구 및 정책연구 사업이 중복돼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데, 전북도로부터 많은 출연금을 지원받는 전북연구원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를 분석해 이처럼 중복 추진된 사례가 또 있는지 조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 등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의회와 소통 없이 관련 사업비를 내던 예산안

에 편성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퇴직공무원의 전북도 유관기관 취업 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대책과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교류센터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물품 6천만원 상당을 해외에 지원하면서, 배송비로만 3천만 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한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유독 특정기관에만 편중해 지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그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 “익산 용제~완주 삼례간 노선 지방도 승격 필요”

문건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란)는 17일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익산 용제~완주 삼례간(춘팔선) 지방도 승격 관련 현장,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석탑, 국립익산박물관 등 익산 내 주요 사업 현장과 유적지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익산~완주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춘팔선 지방도 승격에 대한 익산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방도 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이어, 익산 고도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인 왕궁리유적 복원 현장과 국립익산박물관을 찾아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시

찰했다. 이정란 위원장은 “전북도가 보유한 유적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궁리 유적은 백제왕궁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으로 미륵사지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유호상 기자

## “무주군 동부권 사업 전반 감사 요망”

황의탁 도의원 “매년 300억 지원중이나 관리·감독 부실”

전북도의회 황의탁(행정자치위원회, 무주군) 의원은 17일 제3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미진 실·국 기획조정실 질의를 통해 “무주군 동부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전북도가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300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시·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부권 지역의 총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니 시·군의 문제점과 전북도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하는 여태 구두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또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사업비 반환금 누적액이 6억3700만원으로 상당하고 반환금 규모 역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무주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3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어 사업비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무주군은 2017년도 사업비 40억8000만원 중 예비·도비를 최소 14억10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2018년도 사업비 역시 상당부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정책자문위원 위촉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전국 시·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제8기 정책자문위원은 총 18명(신임 16명, 연임 2명)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연구, 협의회 정책 검토 및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전북도 이병렬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부위원장으로 충남도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유호상 기자